

社說

굴욕적 불평등조약 체결을 중지하라 -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체결에 부쳐

오는 20일 제23차 한미안보협력회의가 열린다.

이날 연례회의에서 체결될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은 우리해군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 해방을 전후한 한미관계의 굴절상, 특히 전쟁으로 인한 한미간의 군사적, 정치적 불평등조약을 돌아본다면 이번 협정 또한 대표적인 굴욕의교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지난 7월 가조인된 협정안 초안을 보면 2차대전 이후 신생국, 전쟁발발국 등 어떠한 나라와의 군사협정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조약내용을 보면 전시에 투입될 미중원군의 신속한 작전을 위해 도로, 항만, 상수도 등의 시설과 물자수송, 노무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준비와 점검을 하는 훈련을 갖는가 하면 양국의 비공식회담까지 포함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협정은 특히 남한내 통일세력이 그동안 꾸준히 반대해온 탈스파르티 훈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유럽,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미군철수 및 군사기지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미군주둔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은 1953년 '한미방위 수호조약'에 필적할만큼 굴욕적인 조약이다. 게다가 두 당사국 중 일방이 12개월 전에 통보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는 조항은 국제조약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AFKN 재설, 부천 미군기지, 남한내 전술핵 철수, 군 작전지원권 이양설 등의 기회

용으로 미국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은 남한 민중의 민족적 자존심까지 자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대응은 더욱 굴욕적이다. 현정권은 오히려 미군이 우리의 안보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인식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미군의 자동가입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 국내법상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은 더욱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80년 광주항쟁 때 미국의 묵인하에 무장 군인을 투입, 민중들의 민주주의의 요구와 민족자존권을 짓밟은 것처럼 이번 협정도 사실상 미국의 남한지배주도권과 군사독재정권의 집권구도가 일치한 선에서 일 단락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남북회담에서의 군축제안과 며칠전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발표와도 상충되는 의미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군축제안이나 국제적인 화해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자기모순을 극대화하는 것임을 정권은 알고 있는가. 만약 협정이 발표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폐해와 불이익을 정부당국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근대 개화직후 선진 열강들과의 화해평등이냐 최혜국대우냐 하는, 당시 일반 민중들은 잘 알지 못했던 말들이 침략국에게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제공했었는가를 정부당국은 알아야 한다. 해방후 역대 정권들이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2천만대륙을 독전에 둔 현재까지도 미국의 군사적 압박상태를 극복하지 못한채 불평등외교를 계속해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경희' 단결로 학원탄압에 대처하자 - 대학내 일련의 사태를 보며

며칠전 대구교대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대자보를 베는 등 정경적으로 학원을 사찰,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정보기관의 학원사찰이나 도청사건은 이미 윤석양씨의 양심선언에서도 폭로되었듯이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질 정도가 되었으니 일선 행정직원이 주변 대학가의 동향을 파악해왔다는 데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작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이후 계속적으로 대학에 대한 간섭과 탄압을 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한때 '사회의 동물'로 인정받기도 했던 대학을 더이상 대학당국과 대학인의 자율에 맡길 수 없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6.30대사건을 배경으로 최근 학생운동 세력을 과격, 폭력화로 치부하는 경향은 정권과 언론이 내선 선거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변혁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학생운동세력을 미리 제압하고자 하는 정부의 복안이 담겨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방침은 지난 10월 공주고대에서 총학생회장을 징계한 사건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공주고대의 경우 총학생회가 전교조소속 교사를 초청 교육현장의 실태를 들으려 했을 뿐인데 '불법단체'와 연계 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장을 징계하고, 징계위원회를 요구한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의 집에 협박전화까지 한 것이었다.

또한 국제대는 자동판매기를 학생이 관리한다는 것 때문에 징계된 예다. 더욱이 학교직원이 학생회에서 부당한 대자보를 떼거나 훼손하는

사태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는 커녕 오히려 최근 전남대의 파출소 습격을 대서특필하며 사건의 본질보다는 폭력적인 현상만을 극대화해 여론을 호도한 점이 없지 않다.

이번 전남대 또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의 경찰폭력과 학생폭력의 상관관계를 따지거나 학생들의 과격·폭력을 지나치게 매도하는 양상들을 보였다.

학원안정화대책 이후 각 학교들이 학생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탄압이 미미했던 것을 반영하듯 본교에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난 11월초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활동모임인 동아리를 사찰해온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다.

본교가 개교와 함께 대내외로 연륜을 쌓은지 4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 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서로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학내에 산재된 비민주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학원을 민주화하기 위한 노력과 전통을 꾸준히 해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걸맞게 교육부와 정보기관에 맞서 '경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학의 민주화를 몇몇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대학인 스스로도 깊어있는 반성과 자기성찰을 해야한다. 사회여론과 언론의 허위선전공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대학인은 주체적으로 인식과 행동을 넓혀가야 하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학원전략에 무기력한 대응만 하고 있어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7차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각 경제주체의 새로운 각오와 희생정신이 요구된다' (경향신문의 7차 5개년 계획의 내용과 문제점을 다룬 기사). '하루 30분씩 더 일한다' (중앙일보의 사회면 특기사 제목). '다시 뛰자' (조선일보의 사회면 특기사 제목).

지난주 각 일간지들은 거의 두세면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정부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7차 5개년계획을 선진국권 진입에 있어서 호기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사실, 논평들을 통해 많이 다루었다.

정부의 큰 계획이 나올 때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하지만 대부분 사실들의 흐름은 계획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일관된 정책집행이 있어야 할 것을 대중대중 지적하고 경제주체들, 즉 기업, 근로자, 가계들의 협조(?)를 구하는 식이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에 대해 언론사들은 언제나 재벌들의 소유집중을 분산하는 정책들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논평을 해왔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 '돈구를 잡기'식으로 당위론만 확인한채 현 한국사회의 특성상 자본의 힘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이번 경제개발계획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를 살펴보면 재벌,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선진국권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노사갈등은 아예 없이 지내고 임금인상이나 하는 것들로 파업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라는 논조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광범위한 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 한다.

이번 7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제도권 언론의 보도양식 또한 이에 상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새롭게 창출까지도 한 것이다.

어떤 경제정책도 그것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경제정의실현장치들이 있어야 하며 언론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의 유보에서 보아왔듯이 경제정책이 다수의 복지를 위해서 적용되려면 그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들을 풀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김기태기자)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보도태도

목소리를 조금씩 줄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의 상황이 그러했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타부문에 대한 우월성을 감안해 볼때 희생해야 할 경제주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다.

보도양태들은 다분히 그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산업정책경쟁력, 즉 제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한국경제 위기의 탈출구라고 이미 단정을 내린 상태에서 남은 것은 노사화해요, 임금인상 억제일뿐이다.

제3차 아·태 경제협력회의의 결과를 진단한다

APEC

EC통합 대응한 블록 형성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호주방문시에 호주수상과의 회담에서 태동한 APEC은 여타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며 배타적 블록화에는 반대하는 개방된 지역협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1차는 캔버라, 2차는 싱가포르, 그리고 이번 3차 서울 회담에 이르렀다. 참가국은 중국, 일본, 호주, 뉴

으로 15개국이다.

3일간의 열띤 이번 회담에서는 쌀 시장개방문제를 둘러싸고 개방에 반대하는 한국·일본 등과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호주·태평양·뉴질랜드 등이 활발한 마찰접촉을 벌인 결과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쌀시장 개방을 포함한 각 분야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상설사무국 설치와 경비조달에 관한 문제를 고위실무급회의(SOM)에 일임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력자원 개발 등 10개의 우선 협력사업이 현재까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더욱 촉진하는

美, UR 타결 위한 별도 선언문 관철 무산된 2+4회담, 북한 핵개발 저지 수단

연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별도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협상이 마무리 지었다.

15개 참가국 대표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관한(APEC)선언에서 농산물, 섬유, 서비스시장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개방을 촉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연내타결을 위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중요성과 실질적인 자유화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통상법 301조의 무차별적 운용에 대한 대미통상국들의 불만을 담은 것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타결을 위해 미국과 나머지 회원국들이 타협한 결과이다.

대표들은 '서울 아펙선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방안'과 '여타 모든 경제제재들이 이익에 합치되는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강화할 것'이라며 역내 전체에 걸쳐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아펙의 장래문제와 관련해 좀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한반도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관련국 외무장관들이 자연스럽 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연쇄접촉을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자회담이었지만 서로 번갈아가며 거의 동시에 연쇄적으로 만나 마치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회담의 성격을 띠었다.

서울에서는 한·미, 한·일, 한·중회담과 일·중의무회담이 열렸고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행선지에서 미·일·일·미·중(의무)회담을 포함하면 5~6일 사이에 모두 접촉하게 된 셈이다. 4개국의 공통된 입장을 분명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일정에서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당사자회담이 재확인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며, '포린 어퍼어즈'지의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해결을 통한 남북한과 미·일·중·소의 이른바 '2+4' 회담을 제의했던 베이커장관은 이번

방한기간중 '2+4'회담은 대북 핵압박을 위해 검토했던 것이라고 해명함으로써, 이의 한반도 통일 문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우리측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베이커 장관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도 한국정부에 1차적 주도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2+4'회담구상의 사실상 백지화를 뜻하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에 '외세'개입을 차단하려는 우리정부의 정의의의가 주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또다른 성과는 연내에 중국과의 수교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천지천 중국외무장관과 노태우대통령의 요담, 천지천과 이상욱의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중과의 공식적인 수교가능성을 재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회담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로서는 북한 핵저지를 위한 쌍무회담, EC와 북미지역 경제협력체에 대응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틀마련, UR 및 무역자유화의 타결을 위한 협상, '2+4' 회담에 대한 무효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주체적 입장 표명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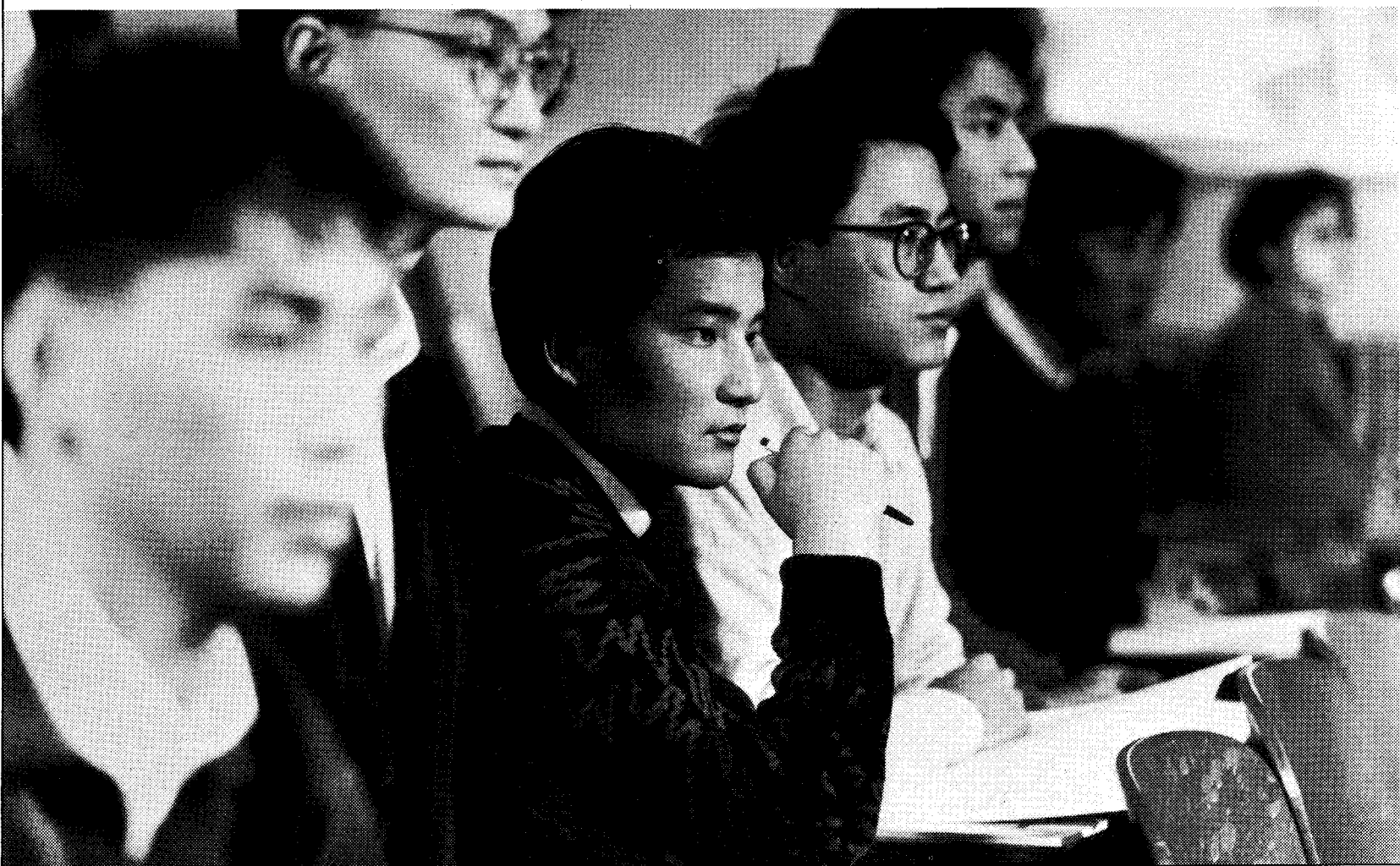
반면에 APEC회담의 본래 목적인 아·태경제협력 문제기 뒷전으로 밀리고 UR협상장으로 변질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UR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APEC참가국 주재 대사들이 기한한 'UR협상'에 관한 APEC선언'처리과정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당초 초안에 강조표시까지 있었던 '다자간 분쟁 해결은 다자간 논의에서 해결하며 일방적 조치는 안된다'는 구절이 한국등을 상대로 실시장개방을 요구해 온 미국 등의 요구가 완화된 형태로 변형된 것은 향후 APEC 장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APEC의 장래전망은 APEC과정의 지속적 역동적 성격을 감안 APEC은 역내경제상황 및 세계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경제 정책적 도전에 대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 명 찬
(대학원 석사4기·무역학)

꿈을 꾸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三星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젊은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에서 시작하여 이룩한 한강의 기적 — 우리가 달려온 길은 멀고도 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허리를 누추아도 뒤편에는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등의 자리를 놓쳐 본적이 없는 선진국들이 뒤고 있으며 21세기까지 남은 시간도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좁혀 나가는 일 — 그것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삼성은 세계가 앞잡아 보고 나라 전체가 우려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도체를 개발하고 세계 두번째로 슈퍼 VHS를 만들었으며 8mm 캠코더용 렌즈를 개발함으로 우리의 내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 이룩한 작은 성과에 만족하며 좁은 우물속에 안주하려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젊은이는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패기에 찬 젊은이, 땀에 젖은 얼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이,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젊은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21세기를 열거할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